

# “현장 못 바꾸는 휴게시설 의무화 의미없어…모든 노동자에게 쉴 곳을”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1.12.15 14:33

## 민주노총,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휴게실 문제는 건강권 넘어선 인권의 문제"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앞둔 시점, 사업장 규모와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쉴 곳을 제공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나왔다.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과 함께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비좁고 열악한 휴게실 실태의 문제는 이제 건강권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다. 모든 일터에는 차별 없이 휴게시설이 제공돼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휴게실 최소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설치과정에 노동자 참여 명시 등이다. 이들은 특히 이동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사무직의 휴게공간 마련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행령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노동자들이 이 개정을 잘 알아야 한다. 이제는 청소노동자가 화장실에 앉아서 식사하거나, 계단 밑 앉아서 쉬지 않아도 되고, 폭염 속 건설노동자가 그들을 찾아 헤매지 않아야 한다”며 “노동자의 쉴 권리는 법에 보장된다는 사실을 보다 알리고, 노동자 인원수와 작업장 조건으로 예외조항을 만들어 개정 취지에 어긋나게 만들려는 움직임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조합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조지훈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은 “대부분의 간접고용 콜센터는 휴게시설이 없다. 원청은 비용을 줄이려하고, 하청은 중간착취 수수료를 높이려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회사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오직 감염 매개체로만 판단한다. 콜센터노동자들은 각자 자리에서 밥을 먹는 상황을 개선하려하지는 않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온다며 밥 냄새 빼라고 호들갑 떨게 만드는 등, 모든 원인과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지우려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우리 지부는 지난 9월 원청과 충분한 휴게공간 확보에 대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코로나를 이유로 휴게시설 설치 불가와 비용문제로 작업공간 확대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이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휴게시설 하위 법령에 사외하청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훈 사무금융노조 에이슨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이 콜센터 노동자의 휴게실 실태를 증언했다. © 송승현 기자



김상윤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서북지대 청년위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건설노동자들이 겪는 휴게실 현황과 실태를 사진으로 고발했다. © 송승현 기자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윤 건설산업연맹 서울건설지부 서북지대 청년위원은 “300명 정도가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선풍기 한 대만 돌아가고 있다”고 하며 “몸을 쓰는 노동자일수록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시설과 기구가 전혀 구비되지 않다. 사람이 쉬어야 할 곳에는 철근이 쌓여있고,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없어 계단에서 소변을 보다 보면 ‘내가 개나 고양이도 아닌데’하며 인간으로서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다.

한건희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 평등지부 조직부장은 민간위탁 폐기물수집운반노동자의 휴게·샤워시설 실태를 발표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의 특성상 샤워실이 반드시 필요한데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환기시설 미설치, 온수기 미설치 등 샤워실 설비 자체가 열악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어느 사업장의 경우 시래기(나물) 건조장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건희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조직부장이 현장노동자를 대신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휴게 실태와 시설이 열악함을 증언했다. © 송승현 기자

최명선 민주노총 노안실장은 “김용균법으로 김용균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듯, 이대로라면 휴게법이 만들어져도 휴게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장의 변화가 없는 시행령 개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치 예외조항을 전부 시행령으로 넘겨놓아서 사업주들은 (설치 의무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벌써부터 20인 사업장 규모 얘기가 나오고,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고도 있다”고 한 뒤 “이번 개정으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책임을 방기해선 안된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이 15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실 실태를 증언하는 한편 휴게실 설치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2월 15일 ☞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인사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 현장 증언

콜센터 노동자  
사무금융업  
콜센터지부 지부장 조지훈

건설 노동자  
건설산업연  
설지부 서북지대 청년위원 김성윤

생활폐기물  
공공운수  
부장 한건희

●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이 휴게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